

“자유총연맹 관제 데모, 정무수석에 보고”

연맹 고위 관계자 증언

행정관→비서관→수석비서관 순 개최 보고 이뤄진 듯

靑 허현준 행정관 집회 지시·소극적일 땐 정관주 나서

청와대 5~6회 들어가 지시받아

어버이연합 관계자 배석도

역사교과서 고시·세월호 특위 때 본격적 요구받아

회원들 내부 의견 갈려

청와대 허현준(48) 국민소통비서실 행정관

2015년 한국자유총연맹(지총)에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2015년 7월~2016년 6월 재임)도 보고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청와대의 관제 데모 개최 보고가 ‘행정관→비서관→수석비서관’ 순으로 이뤄졌다는 의미인데, 이 같은 내용의 보고가 당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2015년 2월~2016년 5월 재임)에게도 전달됐을지 주목된다.

이 같은 주장은 허 행정관 지시로 관제 데모를 실행했다고 폭로한 자유총연맹 고

위 관계자 A씨의 입을 통해 나왔다. A씨는 2015년 10월22일~12월2일 사이 허 행정관으로부터 시국 관련 집회를 열리는 지시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받았던 인물이다.

A씨는 24일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관제 데모 지시 실무를 맡았던 청와대 측 직원인 허 행정관이었으며, 집회 개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엔 정관주 비서관이 직접 압박을 가했다고 증언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으로, 정관주 전 비서관은 문화체육부 1차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현재 구속 상태다.

A씨는 “허 행정관은 자유총연맹 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수단체’라고 불리는 단체들을 관리했다”며 “우리가 지시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정관주 비서관이 직접 나서서 허준영 당시 중앙회장과 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도와주셔야죠’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히 자유총연맹의 관제 데모 지시가 당시 현 정무수석에게까지 보고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 행정관이나 정 비서관이 (현기환) 수석계도 말씀 드린 사안이다”, ‘수석이 관심 갖고 계신다’며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청와대로부터 시위를 좀 더 ‘전투적’으로 할 것을 요구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는 몇몇 과격 단체의 이름을 거론했고 우리를 향해선 비난 섞인 말로 ‘연맹이 너무 점잖다. 더 전투적이 돼

야지 그래서 되겠냐고 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집회 지시를 받기 위해 청와대에 5~6차례 직접 방문한 사실도 털어놓았다.

그는 “허 행정관이 ‘집회 관련 논의 좀 드리겠다’며 청와대로 불렀다. 어버이연합 관계자가 배석할 때도 있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 자리에서 ‘행사를 많이 해달라’,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자유총연맹이 앞장서줘야 하지 않겠냐’ 등을 요구받았다”며 “허 행정관은 시위 등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기사 등 자료를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관제 데모를 열기 위해 자충 예산을 써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연맹 예산 중 예비비나 특별경비, 특별계기사업 등을 통해 행사 비용을 마련했다. 다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협조할 때는 비용은 지급하지 않고 인원 지원만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소정의 식사비와 교통비를 지급했는데, 식대와 함께 거주지에 비례해 교통비를 차등해서 1인당 총 5000원에서 1만5000원가량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청와대의 관제 데모 압박이 다른 단체에게도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청와대로부터 집회 요구를 본격적으로 받은 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와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선 즈음이었다”면서 “정부에서 중요 정책을 추진하거나 위기 상황일 때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금은 더한다고 봐야 한다. 현재 소위 ‘보수집회’라고 하는 행사에 나서는 단체들은 서로 교감대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한데 뭉친다고 했을 때 그 매개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A씨는 또 당시 허준영 자유총연맹 회장이 국정교과서 찬성 집회에 회원들을 동원하는 문제를 심각히 우려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국정교과서 찬성 집회 문제로 허 회장이 상당히 고민했다. 교과서를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국정화가 맞느냐며 난색을 보였다”고 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불협음은 회원들 사이에서도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자충이 전국 단위인데, 호남 쪽은 색깔이 다르다. 호남 쪽 회원들이 ‘국정교과서는 아니지 않냐’고 반발하니 단체가 내부적으로 쪼개져 버리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도 내부 의견이 갈렸다고 A씨는 전했다.

그는 “세월호 특조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 회원들이 불편해하고 (집회 참가를) 거부했다. 청와대에선 하라고 하는데 인원 동원이 잘 안 됐다”고 토로했다.

A씨는 “허준영 회장은 재임 시절 ‘보수는 원칙과 법질서를 지켜서 더불어 사는 것’이라는 말을 강조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다고 본다”며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이런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다. 나는 지금도 자유총연맹을 사랑한다. 단체가 새 시대에 맞게 탈바꿈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뉴시스

“국익 우선 맞춤형 통상외교 펼쳐”

문재인, 외교안보 분야 4대 키워드 제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관련, “국익 우선의 맞춤형 통상외교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이 주최한 ‘트럼프 정부 출범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맞아 ▲국익 우선의 외교 ▲맞춤형 협력외교 ▲책임안보외교 ▲통상외교 강화를 4가지 키워드로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안보·외교는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며 “국익을 지키지 못했고 평화는 깨지고 안보는 불안해졌다”고 규정했다. 그는 “대의 의존도가 높은 경제 상황은 갈수록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은 다른 나라와 협력해 공동번영을 실현하는 것이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이점을 살려 우리 영토를 대륙과 해양으로 확대하는 외교가 국익우선 외교”라고 부연했다.

그는 “동북아에서 미·중 간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우리로서는 70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한 뒤, “새로운 도전 앞에 지금까지의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세계 모든 나라와 우호를 증진하는 맞춤형 외교가 한층 더 요구된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남북·한미관계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주한미군 방위비부담 증액 등 새로운 현안이 등장할 수 있다”며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기조로 당당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핵 문제도 미국과 협력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체제를 이루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통상외교와 관련,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통상 현안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 문제는 우리 경제를 좌우하는 문제”라고 말한 뒤,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역이 여전한 세계 발전에 도움이 되고 믿는다. 앞으로 다칠 과고를 미리 대비하고 예측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불확실성 체제에서 우리는 유연하고도 당당하게 외교를 해야 한다”며 “나라를 평화롭게, 국민을 편안하게, 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통상외교 정책이 필요하다. 국익 우선의 맞춤형 협력 외교를 위한 면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

최인정·양용호 의원, 군산조선소 관련 현대중공업 본사 앞 1인 시위

도의회 국민의당 최인정 의원과 양용호 의원은 24일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 앞에서 ‘군산조선소 폐쇄는 군산 조선업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1인 시위를 펼쳤다.

최 의원과 양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되면 5,250명의 근로자와 80여 협력업체가 대량 실직과 줄도산으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초토화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울산조선소(군함 건조용 도크 2개 제외)의 도크 8개 가운데 3개, 군산조선소 도크 1개를 폐쇄한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군산조선소의 유일한 도크 1개 폐쇄는 울산만 살리고, 군산은 죽이겠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인 현대중공업이 올바른 지역경제 살리기 경영을 추구한다면 울산조선소 도크를 1개 더 줄이고, 대신 군산조선소를 존치하는 것이 지역상생 경영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인재용 기자

민주당 대선후보 ‘국민경선’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대선 후보 선출 경선을 ‘국민경선’ 형태로 치르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경선에 대해 당원과 국민에게 동일한 투표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승조 민주당 당헌당규정령정책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문관에서 경선을 관련 의결사항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뉴시스

반기문·정의화, 제3지대 구축 공감

반기문 전 유엔사부총장과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24일 오찬 회동을 갖고 비패권 제3지대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반 전 총장과 정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종로 한 한식당에서 1시간가량 오찬 회동을 가지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두 분이 강조한 것은 비패권 세력, 언론용어로는 ‘제3지대’라 밝혔다.

정 전 의장도 회동을 마치고 “지금 필요한 것이 지금 소위 비패권 제3지대,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 전 총장과 협력하기로 한 것인 가라는 질문에 ‘약속한 것은 없고 설지 나서 다시 한번 만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추후 회동을 기약했다. /뉴시스



훼손되는 박 대통령 풍자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골, 바이! 屨’에 전시된 이구영 작가의 박근혜 대통령 풍자화인 ‘더러운 짐’을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강제로 철거, 훼손하고 있다.

이재명·박원순·김부겸 ‘야3당 공동정부’ 추진키로

실현방안 마련 등 4가지 사항 합의... 문재인 “아직은 이르다”

이재명 성남시장·박원순 서울시장·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3당이 참여한 공동정부 수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세 사람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 총 4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합의문에는 ▲야3당 공동정부 수립 ▲공동정부 추진을 위한 야3당 원탁회의의 조속 개최 ▲공동정부 추진 대선주자 연석회의 개최 ▲결선투표나 공동경선, 정치협상 등 야3당 공동정부 실현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춧발민심이 갈망하는 ‘국가 대 개혁’을 위해서는 ‘정권의 확실한 교체’와 함께 ‘강력한 공동정부’의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우리는 야3당 지도부가 ‘정권 교체와 국가 대 개혁 완수를 위한 공동정부 추진 야3당 원탁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세 사람은 그러면서 “우리는 야3당의 대선주자들에게 ‘정권 교체와 국가 대개혁 완수를 위한 공동정부 추진 대선주자 연석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자고 제안 드린다”

며 “결선투표나 공동경선, 정치협상 등 야3당 공동정부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국민의 뜻을 모아 야3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이 이에 동참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은 지난 17일 야3당에 개방형 공동경선을 요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당시에는 야3당 공동경선 추진에 난색을 표하며, 합의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이번 ‘공동정부 추진’에 대해서는 뜻을 함께 했다.

이 시장 측은 통화에서 “야3당 공동경선에 대해서는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달라진 바가 없다”며 “다만 개혁을 위해 공동정부를 구성해 야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이재명 성남시장·박원순 서울시장·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야3당 공동정부 수립과 관련, “공동정부를 말하는 것은 아직 우리 당의 경선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고, 다른 야당의 준비도 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르다고 본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구금 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앞으로 전북도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돼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 활동비 지급이 제한된다.

2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송지용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의회 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2월 14일 개최하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그 동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더라도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비가 불가능하므로 의정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없게 된다.

송지용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은 도의회가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청렴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소 제기돼 구금상태인 강영수 부의장은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의정활동비를 받지 않겠다고 전했다. /인재용 기자

세월호 유족들, 차대통령 ‘7시간 행적’ 특검 고발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7시간 행적’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로 탄압 고발했다.

세월호 유족들이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문제 삼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는 24일 오후 정명선 운영위원장을 대표 고발인으로 해 박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4·16가족협의회는 김기춘(78·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도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보좌 업무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번 고발에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4월16일의 약속국민연대(4·16연대),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가 고발인으로 함께 했다.

이들은 고발장 제출 전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들은 직무를 심각하게 해태해 세월호 참사라는 사건을 초래했다”면서 “특히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건설을 목표로 활동하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도 저지른 바 이 행위에 대해 면밀히 수사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시스

바른정당, 중앙당 창당대회 대표 정병국

바른정당이 2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대선을 향한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했다.

지난 5일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숨겨왔던 창당 작업에 매진했던 바른정당은 20여일만에 창당작업을 마무리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정병국 의원(5선·경기 여주양평)을 초대 당대표로 공식 추대했다.

정 대표는 새누리당 분당 사태 당시 비상사국위원회를 주도하고 탈당 후 개혁보수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으며 신당 창당 작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당 최고위원으로는 김재경(4선·경남 진주)을 홍문표(3선·충남 홍성예산) 이혜훈(3선·서울 서초갑) 오세훈 전 서울시장, 지명직에는 추호영 원내대표(4선·대구 수성) 이종구 의원(3선·서울 강남갑) 등을 각각 추대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2인이다. 바른정당은 추후 당 대표와 최고위의 협의를 거쳐 지명직 최고위원과 당직자를 임명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는 두개인데 청년, 여성, 장애인 몫을 배정하거나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당 사무총장과 부총장(당무본부장·전략홍보본부장) 등 당직자의 경우에도 인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